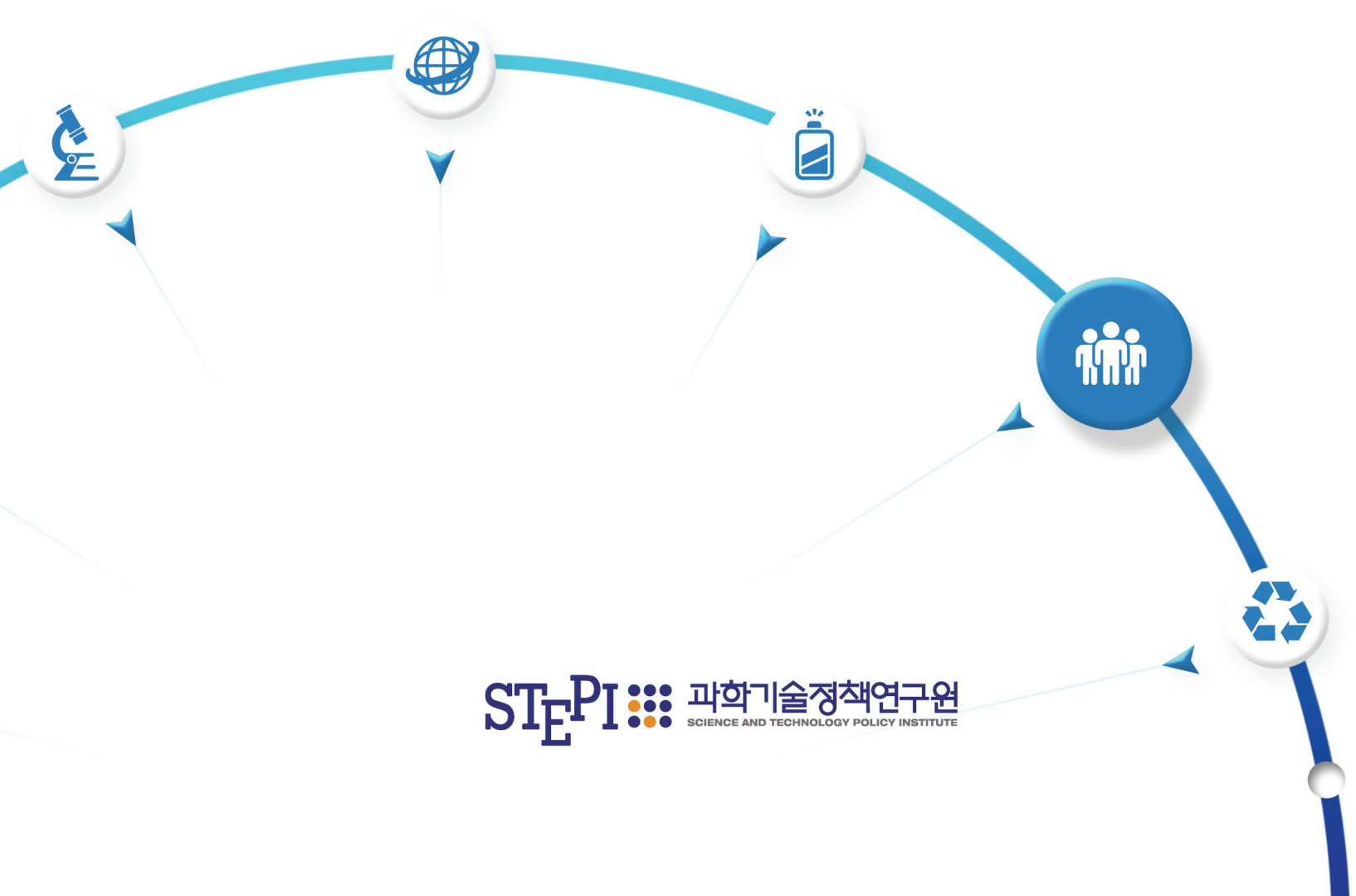


STEPPI INSIGHT

| 2015. 10. 1. 제175호 |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조직 활성화 방안**



| 2015. 10. 1. 제175호 |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조직 활성화 방안

김종선·성지은·이정찬

• 목 차 •

〈요약〉

I. 배경 및 필요성	4
II.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활동 현황	7
III.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 현황 분석	12
IV. 기술혁신 연계조직의 육성 방안	15

「STEPI Insight」는 창조경제, 일자리, 성장동력, 고령화, 환경, 안보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경제와 관련된 정책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습니다.

| 요약 |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확대 속에 이 분야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역량은 취약한 실정이며, 이들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할 경우 보다 많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함
-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현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연계 고도화가 필요함

□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활동 현황

- 사회적 경제 내에 높은 기술혁신 의지와 다양한 기술혁신 활동들이 존재함
- 그러나 자체 기술혁신 역량 부족과 외부 기술혁신 연계기능 부재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립되고 어려운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낮은 영업이익으로 항상 새로운 사업 모델로의 기술혁신 활동이 필요함
 - 그러나 자체역량 부족과 외부 기술혁신 연계기능 부재로 기술혁신을 포기하거나, 고립된 형태의 자체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사회적 기업은 외부 기술혁신 연계 기능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사업 참여 및 지원도 어려운 상황임
 -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자체 역량 부족으로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사업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유무, 벤처기업 등의 참여 자격조건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참여가 어려움
 - 정부 연구개발 조직들은 첨단기술개발 문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 지원 또는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 현황

- 광역 단위 이상의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부재함
 - 광역 단위 이상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주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경영지원, 컨설팅, 판로 및 홍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기술혁신 연계기능은 부재함
-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외부 주도로 인해 자체 기술혁신 연계역량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공지역도 소수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안정적이지 않음
 - 성공지역은 몇몇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 인력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사라짐

□ 사회적 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연계조직 활성화 방안

과제 1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국가 기술혁신 연계시스템 구축

-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한 국가 기술혁신 연계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술혁신 활동조사 사업 실시

과제 2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

-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범위에 따른 맞춤형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실증사업 수행

과제 3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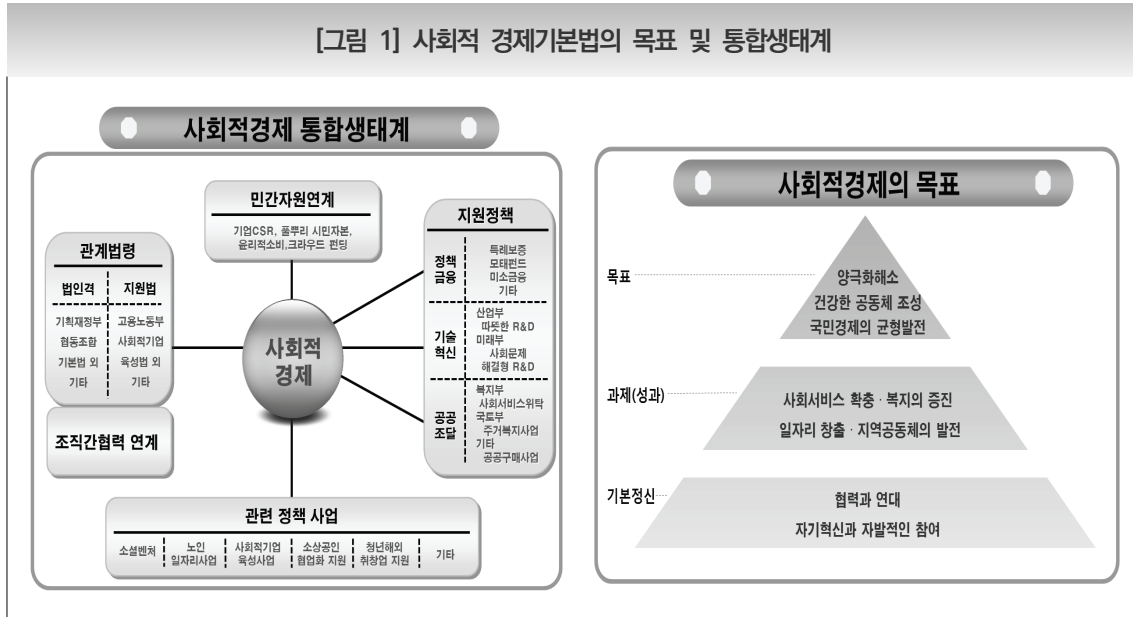
-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한 개방형 혁신 인프라 개발 및 제공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참여 확대
- 정부 연구개발 기관에 사회적 경제 협력 인센티브 개발 및 도입

I. 배경 및 필요성¹⁾

□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확대 속에 효과적인 기술혁신 역량강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임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련법 제정 및 지원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음
 - *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시작, 2011년 협동조합 법 등 제정
 -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경제기본법까지 고려되고 있음

[그림 1]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목표 및 통합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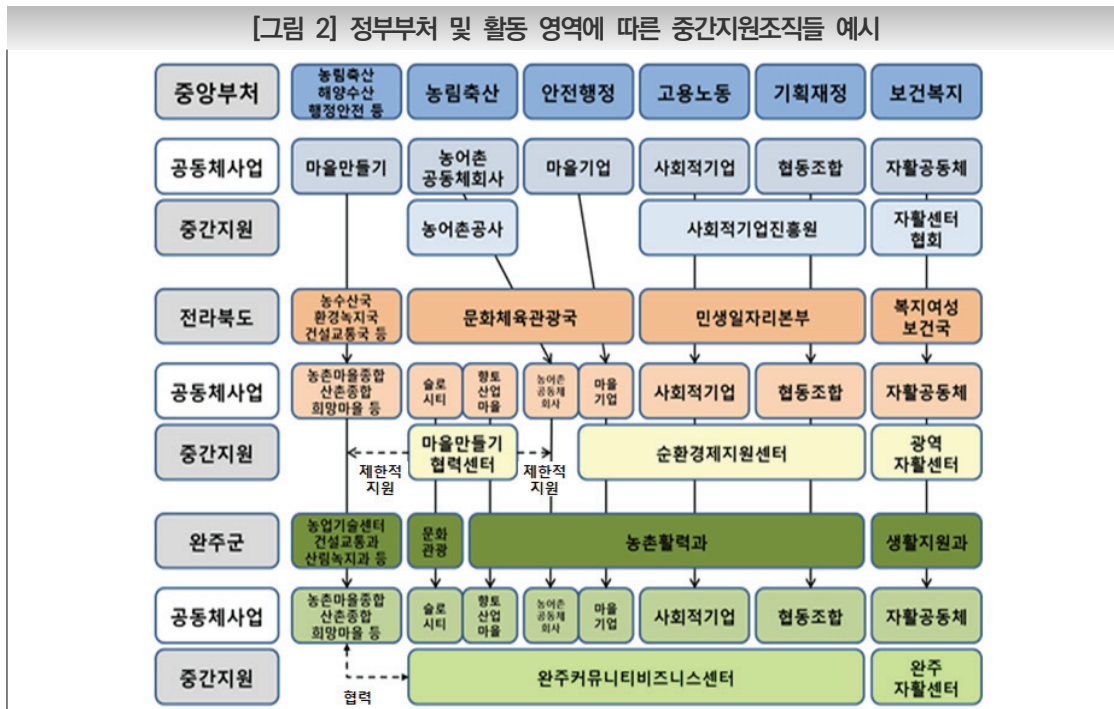
자료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회(2014)

-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혁신역량 취약 속에 정부 주도의 기술혁신 지원 사업만이 고려되고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역량은 취약한 실정임
 - *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경우,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과학기술 활용과 거리가 멀고, 기술혁신 역량이 취약함
 - 정부도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고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 주도적인 접근임
 - * 사회적 경제기본법에서 기술혁신을 3대 지원정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세부 정책들은 따듯한 연구개발 사업,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주도의 개발 및 지원 사업분임

1) 본 고는 발간 예정인 김종선 외(2015a),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 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 사회적 경제조직의 자생적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현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조직으로 고도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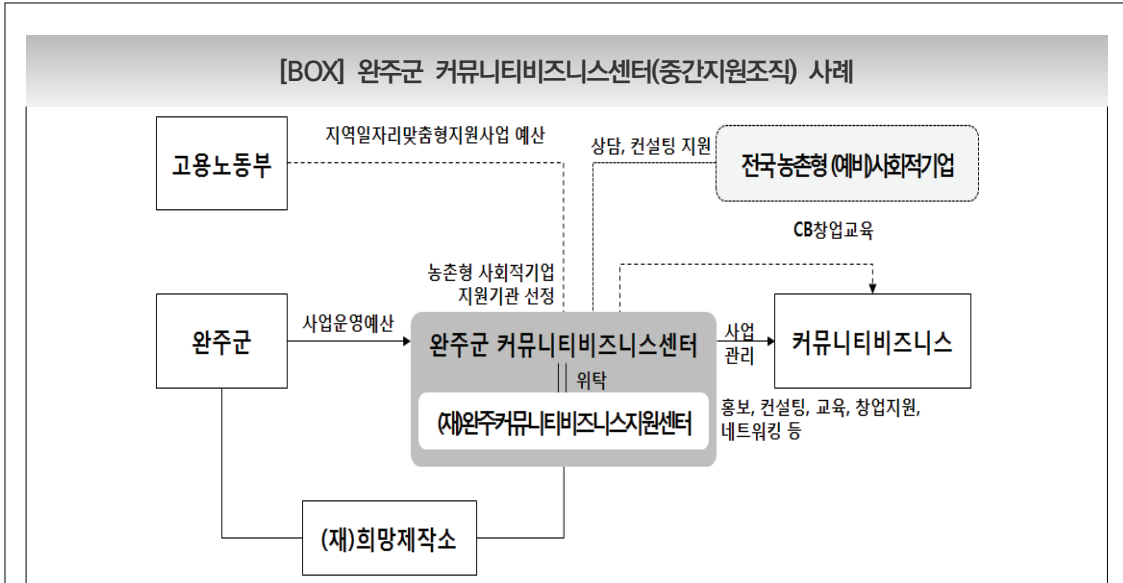
- 정부 주도 하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위한 기술혁신 역량의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나 민간 기업이 사회적 경제가 다루는 모든 사회적 서비스 수요를 예측하거나 모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혁신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부주도의 Top-down 정책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Bottom-up 지원 정책의 병행이 필요함
 -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경우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함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전국 단위, 광역 단위, 지자체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함
 - *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민간의 중재, 민간 간 협력·조정, 부족한 민간 역량 보완·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지칭함 (임경수, 2013)
 - *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전국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 단위에서 순환경제지원센터, 지역 단위에서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함



자료 : 임경수(2013)

-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매우 중요함

- * 김종선 외(2014)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된 소수 지역에는 역량이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존재하며, 이들 조직이 지역주민의 교육 및 조직화, 지역에 맞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업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음을 밝힘



자료 : 김재현 외(2013)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는 완주군청과 지역 주민을 연계하는 지역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이다. 이 센터는 희망제작소의 도움을 통해 지역 자원과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내 커뮤니티 비즈니스들을 완주군의 사업지원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완주군 로컬 푸드 사업은 2012년 시작한 지 3년 만에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회사, 창업공동체, 두레농장 등에서 로컬 푸드를 생산하고 건강한밥상영농조합, 완주로컬푸드주식회사, 농민거점기공센터, 온고을로컬푸드공공급식센터 등의 지역 단위 유통, 가공, 판매지원조직이 만들어졌다. 현재 1,000명 이상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관련 유통, 가공 분야에서 500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또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는 지역에서의 조직력과 믿음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사업과 지역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 활동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중간지원조직)는 지역 내 사업을 기획하고, 연계,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정부의 사업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밀착형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특히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역량 확대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혁신역량 강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높음

- * 김종선 외(2014)에 의하면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문제를 풀기 위해 과학기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역량이 낮은 수준임
- * 중간지원조직이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외부 과학기술 조직들과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경우,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II.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 사회적 경제의 기술혁신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현황을 설문조사와 집중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음

-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활동을 조사한 사례가 없으며, 본 연구가 최초로 시도함
-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기술혁신 관련 용어, 지식, 경험 부족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보완함
-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들 중에서 가장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혁신 활동현황을 조사하였음²⁾
 - 사회적 기업 정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얻었으며, 설문결과 얻어진 최종 기업 수는 141개임

□ 사회적 경제 내에 높은 기술혁신 의지와 다양한 기술혁신 활동들이 존재함

- 사회적 기업들은 기술혁신에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시도하고 있었음

〈표 1〉 기술개발을 고려 또는 시도한 사회적 기업 수

구 분	기업 수
기술개발 시도 또는 고려 기업 수	109개 (77.9%)
기술개발을 고려도 하지 않은 기업 수	31개 (22.1%)

자료 : 김종선 외(2015a)

- 사회적 기업들은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수기업들은 주로 신기술을, 지역 기업들은 기존 기술 활용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었음³⁾

- 2) 향후 전체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술혁신 활동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유형에 따른 기술혁신 활동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예산적, 시간적 한계로 사회적 기업만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도 시험적으로 충남·세종지역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이에, 지역의 대표성은 가지고 있지 않음
- 3) 우수기업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수상한 기업들이며, 지역의 기업들은 충남·세종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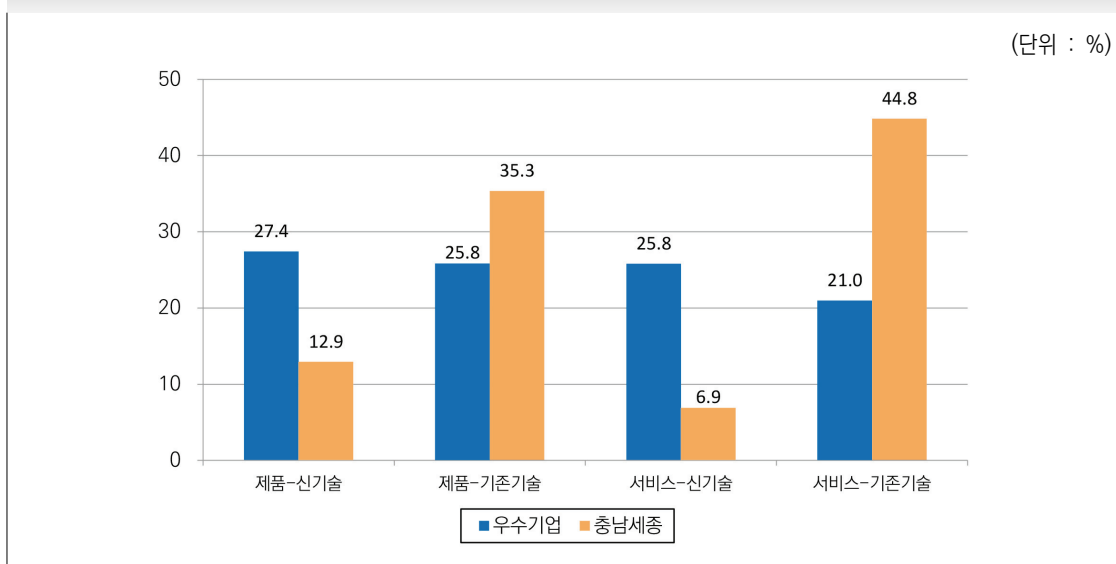
〈표 2〉 사회적 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준과 분야들

단위 : 기업 수

구 분	제품 분야	서비스 분야
신기술 개발	32	24
기존 기술 활용	57	65

자료 : 김종선 외(2015a)

[그림 3] 우수기업과 충남세종 기업들의 기술개발 유형



자료 : 김종선 외(2015a)

□ 그러나 자체 기술혁신 역량 부족과 외부 기술혁신 연계기능 부재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립되고 어려운 기술혁신 활동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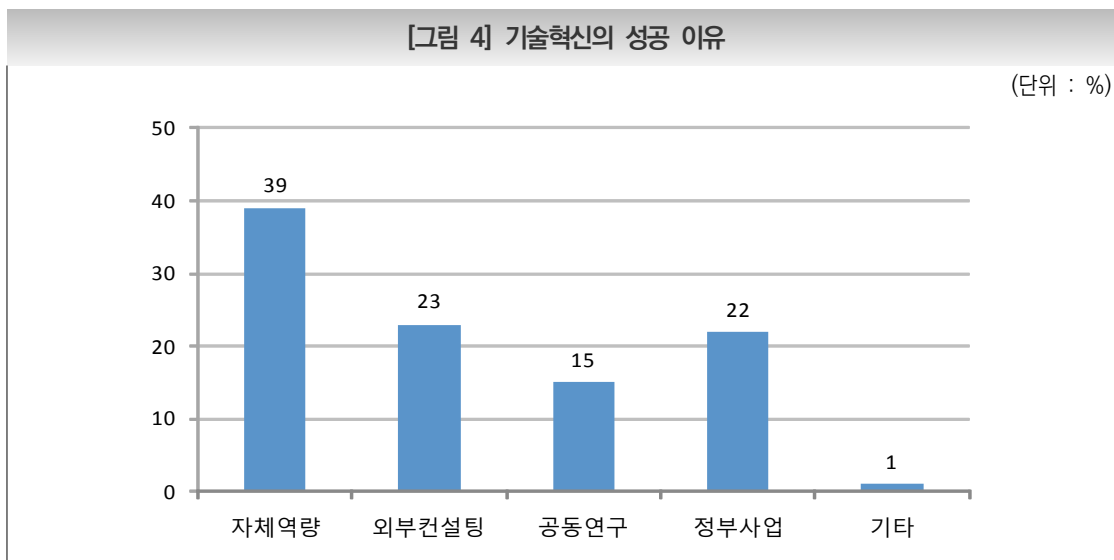
- 사회적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경향이 강함
 - 사회적 기업은 영리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고,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함⁴⁾
 - * (주)심원테크⁵⁾는 제재조 카트리지 사업의 낮은 영업이익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아이템을 찾고 있으며, 천안돌봄서비스센터⁶⁾는 낮은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의료기기를 개발하였음
 -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수행해야만 함

4) 집중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함

5) (주)심원테크는 제재조 카트리지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는 프린터 카트리지의 환경문제 해결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회적 기업임

6) 천안돌봄서비스센터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임

- 사회적 기업은 기술혁신 수요를 잘 알고 있으나, 자체 역량이 부족하여 기술혁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⁷⁾
 - 사회적 기업들은 현장에서 활동함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수요를 잘 알고 있음
 - * 예 : (주)심원테크는 카트리지 재활용 부재에 따른 환경문제를, 천안돌봄서비스센터는 장애인의 다양한 체형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의료기기 문제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었음
 - 이들 기업들은 기술혁신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의 성공요인으로 자체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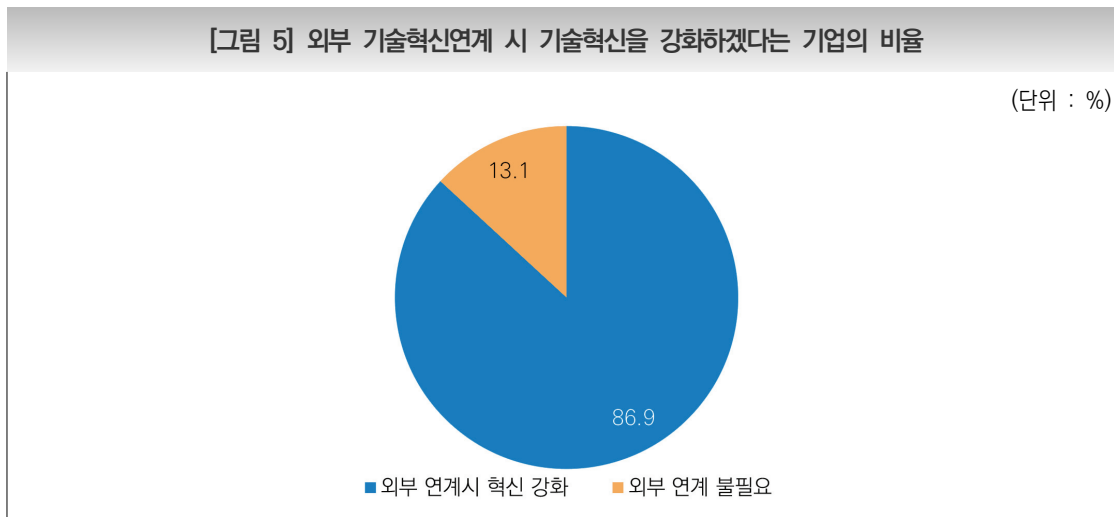
자료 : 김종선 외(2015a)

- 그러나 관련 기술, 인력, 자금 부족으로 기술혁신 시도를 포기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어렵게 노력하고 있었음
 - * 대부분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심원테크, 천안돌봄서비스센터 등은 기술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개발한 경우임
- 기술혁신 역량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외부 기술혁신 연계기능도 부재하여 자체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기술혁신 활동을 하는 경향이 많았음
 - 기술혁신 연계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이 없어, 기술혁신을 하고 싶은 사회적 기업들은 현재 어디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도 불명확한 실정임⁸⁾
 - 생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 (주)심원테크, 천안돌봄서비스센터 등은 외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으나 이를 알 수 없어 자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를 찾고,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7) 집중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함

8) 집중 인터뷰를 한 모든 조직들이 동일하게 대답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들은 외부 기술혁신 연계 기능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었음
 - 기술혁신 연계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연계가 될 경우 기술혁신을 강화할 높은 의지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인터뷰에서도 기술혁신 연계기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음



자료 : 김종선 외(2015a)

□ 사회적 기업들의 기술혁신 활동은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과 잘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정책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 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음
 - 사회적 경제 분야의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이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연계되어 있지 않음(김종선 외, 2015b)
 -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직접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임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역량 부족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하였음
 - * 기존 사업과는 달리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요자 참여형 방식을 사용함
 - 이 사업은 연구개발 실증 및 보급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기획 및 기술혁신 능력의 부족,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⁹⁾

9)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뻔했으나, 적절한 기획서를 작성하지 못하여 탈락한 사례가 존재함

* 이 사업은 초기 사업 기획 단계부터 관련 이해관계자 및 연구개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기획 및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표 3〉 미래창조과학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구 분	기존 R&D	사회문제 해결형
목 적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R&D·R&DB → R&SD	
목 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문제 해결
특 징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융합
주 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은 우수 기술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임
 -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 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참여 자격조건을 선정하고 있음
 -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과 ‘중소기업산학협력사업’이 있음 (자료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기술력이 낮고, 영세해서 사업 참여 자격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첨단위주의 기술개발 시스템 속에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연계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첨단기술 중심의 기술개발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원하는 낮은 수준의 기술과 미스매치가 존재함
 - 사회적 경제조직들과 협력연구에 대한 기관 내 인센티브가 없어, 실질적 협력이 일어나기 어려움
 - *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 연구는 기관 운영 실적에 포함 되지 않으며, 개인 평가에서도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음

III.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현황 분석

□ 광역 단위 이상의 중간지원조직은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없음

-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존 사회적 기업들의 경영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연계해주는 기능은 없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연구개발 지원이 있으나 활발하지 않음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의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보이지 않음
 -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기능은 없음

〈표 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들

구분	내용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내 인건비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컨설팅 자금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시장 확대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 추진 • 사회적 기업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한 윤리적 소비 시장 진작 및 홍보
판로 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접점 구축 및 확대 • 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대국민 인지도 및 인식 제고 • 사회적 기업 생산품의 실제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토대 마련
프로보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을 전문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경영지원을 제공
사회공헌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인력 등에게는 그간 쌓은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자금 지원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업종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민간자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사 1사회적 기업 연결 캠페인
금융 및 세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 기업 전용 보증 등 정보 연계 지원 • 세제 감면 정보 등 연계 지원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협동조합 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분야가 없음
 - 세부사업들로 교육, 설립인가 지원, 경영지원, 권역별 중간지원기관 지원, 홍보, 국제 교류가 있음
 - 반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원 및 연계 사업은 없음

-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에서도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사업은 보이지 않음
 -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 연구, 사회적 경제 조성, 홍보, 교육 등이었음
 - * 사회적 경제조직의 조성 사업들은 주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었음
 - 당사자 조직인 충남·세종 사회적기업협의회도 주로 교육, 홍보, 판로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 사업이었음
 - 전체적으로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경영지원 및 판로 개척, 교육 지원 등이며, 기술혁신 연계기능은 보이지 않았음
- 광역 단위 이상의 중간지원조직들은 기술혁신 지원 및 연계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¹⁰⁾
 - 기술혁신 관련 부서가 없으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혁신 연계인력도 부족하여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지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없거나, 매우 불안정함

- 지역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활동 유형에 따라서 현황 분석을 시도함
 - 본 연구는 지역 내 명확한 기술혁신 수요 속에 기술혁신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와 자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에 기술혁신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구분해 봄
 - 외부주도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유형이며, 자립 발전형과 능동적 연계형은 매우 소수 지역에서 존재함
 - *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은 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부주도형이 많음

〈표 5〉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유형 구분

구 분	혁신연계 무(無)	혁신연계 유(有)
혁신활동 무(無)	정체형	외부 주도형
혁신활동 유(有)	자립 발전형	능동적 연계형

자료 : 김종선 외(2015a)

- 외부 주도형은 주로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부족, 짧은 사업기간 등으로 기술 혁신 연계기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¹¹⁾
 - 정부사업의 한시적 시행으로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움

10)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인함

11) 본 연구는 외부주도형 유형으로 부여상권활성화재단을 살펴보았음. 이 재단은 2014년 중소기업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부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 대개 중앙정부가 2-3년 정도 많은 돈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매칭구조이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 사업이 끝나는 경우 해당 사업과 조직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음
- *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우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제한적 사업기간으로 인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움
 - * 정부 사업이 지역의 기술혁신 수요가 불명확한 가운데 시작하여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시행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음
 - * 자체 인력 부족, 기술혁신 수요 불명확, 관련 맞춤형 해결 프로그램 개발 어려움, 짧은 시간 등은 결국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기술혁신을 연계해야 할 지를 불명확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기술혁신 연계기능 확보를 어렵게 함
- 자립 발전형은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혁신 연계기능은 소수 인력을 통해 시도되고 있음
 - 지역 내 인적역량과 중간지원조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강함
 - * 대표적인 곳으로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제터먹이협동조합), 충남 홍성군 홍성면(마을활력소)이 있음
 - *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인적 역량과 조직력이 있는 지역들임
 -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혁신 연계활동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소수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음
 - * 주로 적정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지 않으며, 외부 기술은 필요한 경우만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함
 - * 1-2명 정도의 소수 인력에 의해서 기술혁신 연계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인력이 외부 혁신연계조직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함¹²⁾
 - *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경우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연계가 없이 자체적으로 학습·견학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능동적 연계형은 기술혁신 연계역량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시스템화까지는 이르지 못함
 - 지역 내 구축된 인적 역량과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음
 - * 문경시의 경우 2000년대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오미자, 사과 추출기술과 관련된 외부 기술혁신 연계를 통해 많은 사업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음(김미자, 2014)
 - 그러나 기술혁신 연계기능이 조직 차원에서 시스템화 되어있지 않고, 소수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 기술혁신 연계 기능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 인력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 매우 불안정함
- 결론적으로 지역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기능은 외부 주도에 따라서 확보가 어렵거나, 조직에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소수 개인에 의존하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음

12)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함

IV. 기술혁신 연계조직의 육성 방안

1.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국가 기술혁신 연계시스템 구축

-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국가 기술혁신 연계시스템 구축
 - 국가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광역 단위에서의 기술혁신 및 연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혁신 연계 관련 제도 개선, 중앙정부 사업 기획, 관련 사업 관리 등의 기능 추가
 -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은 지자체 단위에서 기술혁신 및 연계수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기능 지원
 - *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기술혁신에서 부족한 부분을 광역 단위에서 지원 및 보완
 - * 광역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은 기술혁신 연계지원을 위해서 광역 단위 내 연구개발 조직, 대학 등의 기술혁신 관련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정보 데이터 보유 및 국가 단위 중간지원조직에게 제공
 -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은 지역 내 기술혁신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혁신 연계 활동 수행 및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에 기술혁신 및 연계 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적 경제 분야의 기술혁신 활동조사 실시
 -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 활동조사 실시
 - 관련 정보는 광역 단위에서 취합하고, 국가 단위에서 총괄 보고

2.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

- 중간지원조직들의 활동범위에 따른 맞춤형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
 - 광역 단위 이상에서 중간지원조직 내에 기술혁신 연계기능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및 관련 교육 강화
 - * 전담 부서에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기술혁신을 연계할 수 있는 우수인력 보유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에는 최소 1인 이상의 기술을 알고 기술혁신을 연계할 수 있는 인력 보유를 지원
 -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세미나를 통해 성공 노하우 공유
-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도의 실증사업 수행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이 자신들의 문제를 정의하고, 기획하고, 이를 기술혁신 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실증사업 수행
- 초기에는 지역의 성공 경험과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의 조직화 정도를 평가기반으로 2배수의 후보지역 선정
- 2배수 후보에 대해서 소규모 기획사업 수행 및 평가하여 실증사업 지역 선정
 - * 기획에서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얼마나 주도하였고, 지역 타 기관과 협력 정도, 과학기술 혁신 활용 및 연계능력 확보 전략 등을 평가함
-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5년 정도의 장기적 사업비 지원 및 지자체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 관련 평가는 정확하게 하며, 3년 정도에서 중간평가 실시

3.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활성화 지원 사업 수행

-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한 개방형 혁신 인프라 개발 및 제공
 -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인프라 개발 및 제공 사업 실시
 - * 유럽에서는 디지털사회혁신 정책이라고 하여, 시민사회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혁신 인프라 및 플랫폼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EU, 2015)
 - *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두이노(Arduino)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쉽게 탑재할 수 있는 개방형 하드웨어가 있음

〈아두이노를 활용한 세이프캐스트(Safecast) 사례〉

Safecast는 9.0 강도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후쿠시마 원전을 쓰나미가 쓸고 간 2011년 3월 11일 이후에 Pieter Franken, Joi Ito와 Sean Bonner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노심 용융에 의해 발생한 일본 전역의 방사선 수준과 관련 지표면의 측정 자료 지원을 하려했다. 그러나 Safecast 팀은 방사선 맵 제작을 위해 대중들이 사용한 장치들의 성능이 매우 저품질이고, 활용 가능한 방사선 자료에 거대한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Safecast 팀은 아두이노 오픈 하드웨어 판(board)에 기반한 Geiger counter를 개발했으며, 결과적으로 일본 전역의 오픈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일본 전역의 방사선 수준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Safecast 네트워크는 1,300만개 이상의 자료 점(point)을 맵으로 만들고 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사회적 경제 부분과 연계

- * 서울의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와 같이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중소기업 기술 개발로 목표 변경 고려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 사례〉

2015년 7월 서울시는 북촌을 대상으로 IoT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을 위한 리빙랩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북촌 주민과 늘어나는 관광객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 쓰레기, 관광정보 부족 등의 지역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IT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주민과 관광객이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회적 문제 해결 관점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도록 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관련 사업의 참여 자격조건에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

- 정부 연구개발 기관에 사회적 경제 협력 인센티브 개발 및 도입

- 연구개발 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사회문제 해결 항목 신설

- 개인의 성과평가 부분에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연구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참고문헌

- 김미자(2014), 「지역별 리빙랩 사례 조사 : 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부자료.
- 김재현 외(2013),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중선 외(forthcoming 2015a),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 방안: 혁신연계 조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중선 외(2015b),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육성 방안」, 『STEPI Insigh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중선 외(2014), 「과학기술·ICT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전략」,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본격추진」.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회(2014),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임경수(2013), 「중간지원조직의 광역·시군 간 역할 분담 및 발전방향」,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향』, 지역농업연구원 17차 정기세미나 자료집.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4), 「국회 업무현황 보고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 「국회 업무현황 보고자료」.
- EU(2015), 「Growing a digital social innovation ecosystem for Europ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5년

- 제175호 : 사회적 경제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연계조직 활성화 방안(2015.10.1.)
- 제174호 : 제조업의 서비스화 R&D 혁신전략(2015.9.15.)
- 제173호 :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시사점(2015.9.1.)
- 제172호 : 신기술 시장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2015.8.15.)
- 제171호 :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관리: MUSIC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정책과제(2015.8.1.)
- 제170호 : 미국 보건의료 R&D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2015.7.15.)
- 제169호 : 3D 프린팅 시대의 성장과 지식재산권의 위협(2015.7.1.)
- 제168호 :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 및 과제(2015.6.15.)
- 제167호 : Issues and Challenges in transforming KAIST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Ethiopia(2015.6.1.)
- 제166호 : 독일의 연구개발 시스템 현황 분석과 한국과의 비교 시사점(2015.5.15.)
- 제165호 : 소프트웨어 활용분야별 혁신특성 분석 및 정책방향(2015.5.1.)
- 제164호 :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2015.4.15.)
- 제163호 :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육성 방안(2015.4.1.)
- 제162호 :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2015.3.15.)
- 제161호 :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의 성과와 한계(2015.3.1.)
- 제160호 : 대학 과학기술교육의 미래 전망틀 구축: 시범적 전망 결과와 정책방향(2015.2.15.)
- 제159호 : 'R&D 바우처 제도 도입 방안'(2015.2.1.)
- 제158호 :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리빙랩 : SusLab NWE의 독일 보트롭 사례'(2015.1.15.)
- 제157호 :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을 위한 기술영향평가 개선방안(2015.1.1.)

2014년

- 제156호 : 한-중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2014.12.15.)
- 제155호 : 한-중 FTA와 농업 R&D : 협력과 경쟁을 위한 정책 과제(2014.12.1.)
- 제154호 :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시스템과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 방향(2014.11.15.)
- 제153호 : 한국 R&D조직의 협업 현황(2014.11.1.)
- 제152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2014.10.15.)
- 제151호 :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의 제고방안: 클라우드 소싱을 위한 플랫폼 구축(2014.10.1.)
- 제150호 : Technology Barometer로 본 주요국 혁신 역량(2014.9.15.)
- 제149호 : 정부출연(원) 지역조직(분원) 기능 활성화 방안(2014.9.1.)
- 제148호 : 지식재산 사업화 금융의 이원화와 기반 조성(2014.8.15.)
- 제147호 :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이슈(2014.8.1.)
- 제146호 : 기술지주회사의 가치와 성공조건(2014.7.15.)
- 제145호 : 과학기술·ICT ODA 현황 및 정책 방향(2014.7.1.)
- 제144호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2014.6.15.)
- 제143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지향적 공공구매 방안(2014.6.1.)
- 제142호 :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IT 기술 분석 및 협력방안(2014.5.15.)
- 제141호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제에 관한 소고(2014.5.1.)
- 제140호 : 과학기술과 농촌의 새로운 만남 : 농촌 리빙랩(2014.4.15.)
- 제139호 : 학연교수·학연학생제도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2014.4.1.)
- 제138호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과제(2014.3.15.)
- 제137호 : 과학기술분야 대북현안과 통일 준비(2014.3.1.)
- 제136호 : 시스템과 전략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 활성화 방안(2014.2.15.)
- 제135호 : 지식재산인프라의 글로벌 진단과 경쟁력 제고 방안(2014.2.1.)
- 제134호 : 선진국 진입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감소 현상 및 대응 방안(2014.1.15.)
- 제133호 : 2014년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2014.1.1.)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3년

- 제132호 : 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 전략: 아프리카 보건 및 아세안 글로벌 도전과제 사례(2013.12.15.)
- 제131호 : 미래 과학기술인재상에 대응한 인재양성전략(2013.12.1.)
- 제130호 : 체험 창업현장 활성화 방안 -'(가칭) Startup Safari 프로그램'-(2013.11.15.)
- 제129호 : 공공서비스 목적 R&D 기획 및 성과확산 지원정책의 방향(2013.11.1.)
- 제128호 : 통일독일 사례 고찰을 통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의 정책방향 모색(2013.10.15.)
- 제127호 :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2013.10.1.)
- 제126호 : 창조경제를 촉진하는 IP 금융 기반 구축(2013.9.15.)
- 제125호 : 저성장에 대응하는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 방향(2013.9.1.)
- 제124호 : 패러다임 전환형(Paradigm-Shifting) 과학 연구와 노벨상(2013.8.15.)
- 제123호 :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2013.8.1.)
- 제122호 : 농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혁신 제언-덴마크에서 배우는 현장농업 경쟁력-(2013.7.15.)
- 제121호 : 박사학위자 노동시장의 국제비교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2013.7.1.)
- 제120호 : 기술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2013.6.15.)
- 제119호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이슈 분석(2013.6.1.)
- 제118호 : 창업 한류 촉진을 위한 창업회사 활성화 방안(2013.5.15.)
- 제117호 : 대형연구개발사업(G7) 종료 후 10년, 성과와 시사점(2013.5.1.)
- 제116호 : 개도국 사회수요 기반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 카메룬 사례를 중심으로(2013.4.15.)
- 제115호 : 중개연구의 개념과 성공 조건(2013.4.1.)
- 제114호 : 기업혁신지수: Company Innovation Index(CII)(2013.3.15.)
- 제113호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2013.3.1.)
- 제112호 : 국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2013.2.15.)
- 제111호 :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중심으로-(2013.2.1.)
- 제110호 : 초중고 과학실험교육과 대학의 연구관리 역량 강화에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방안(2013.1.15.)
- 제109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2013.1.1.)

2012년

- 제108호 : 고급 전문 인력의 직무만족도와 해외 유출 요인 분석: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조사 결과를 중심으로(2012.12.15.)
- 제107호 : 지식재산 인프라 진단과 과제(2012.12.1.)
- 제106호 : 이공계 연구중심대학의 진단과 과제: 우수 대학실험실을 중심으로(2012.11.15.)
- 제105호 : '함께하는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2012.11.1.)
- 제104호 :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현황 및 혁신 과제(2012.10.15.)
- 제103호 : 양자 및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아프리카 소외질병 기획 사례(2012.10.1.)
- 제102호 : 박사인력 구성과 일자리 현황의 국제비교(2012.9.15.)
- 제101호 : 캠퍼스 CEO 3만 명 육성 전략(2012.9.1.)
- 제100호 :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 수급 현황 분석과 시사점(2012.8.15.)
- 제99호 : 문제지향적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특성과 정책방향: 사회-기술기획과 사용자 참여(2012.8.1.)
- 제98호 : '통합형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국가위의 역할과 과제(2012.7.15.)
- 제97호 : 사람과 환경, 시설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방안(2012.7.1.)
- 제96호 :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과 시사점(2012.6.15.)
- 제95호 : 출연(연) 기술·기능인력의 현황과 과제(2012.6.1.)
- 제94호 : 과학기술 한류: 동향과 대응(2012.5.15.)
- 제93호 : 과학기술자 평생활용 체제 구축: 실태와 대안(2012.5.1.)
- 제92호 :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2012.4.15.)
- 제91호 : 21세기 핵심자원, 국가과학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2012.4.1.)
- 제90호 :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2012.3.15.)
- 제89호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최근 1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2012.3.1.)
- 제88호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혁신 과제(2012.2.15.)
- 제87호 : 국민생활 밀착형 과학기술의 추진전략과 촉진방안(2012.2.1.)
- 제86호 : 신 과학기술외교 전략으로서의 패키지형 과학기술 ODA 모형(2012.1.15.)
- 제85호 : 2012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2.1.1.)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11년

- 제84호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2011.12.15.)
- 제83호 : 각국 정부의 미래이슈탐색활동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2011.12.1.)
- 제82호 : 거대과학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2011.11.15.)
- 제81호 :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2011.11.1.)
- 제80호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 플랜트 시장 위축 대응 전략(2011.10.15.)
- 제79호 :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술: 사회기술 - 특성과 정책과제 -(2011.10.1.)
- 제78호 : 미래 도시농업의 전망과 과학기술 과제(2011.9.15.)
- 제77호 : 이공계 대졸자의 초기노동시장 경력개발 경로 확충방안(2011.9.1.)
- 제76호 :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벤처기업 육성 방안(2011.8.15.)
- 제75호 :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2011.8.1.)
- 제74호 : 새로운 경제성장원천으로서의 무형자산투자의 역할과 정책과제(2011.7.15.)
- 제73호 : 제2의 IT혁명에 부응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2011.7.1.)
- 제72호 : 이공계 일자리 구조와 진로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향(2011.6.15.)
- 제71호 :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적용방안(2011.6.1.)
- 제70호 : 지역 기술개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2011.5.15.)
- 제69호 : 포스트 자스민(Post Jasmine)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비전과 과제(2011.5.1.)
- 제68호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안(2011.4.15.)
- 제67호 :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STEAM)(2011.4.1.)
- 제66호 : 우리나라 기술혁신활동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2011.3.15.)
- 제65호 : 녹색혁신지수를 활용한 녹색기술 유형별 혁신전략(2011.3.1.)
- 제64호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정책방향(2011.2.15.)
- 제63호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2011.2.1.)
- 제62호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2011.1.15.)
- 제61호 :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11.1.1.)

2010년

- 제60호 : 국방기술력 강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원 총동원체제 구축(2010.12.15.)
- 제59호 : 바이오 및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해외 전문인력 활용을 중심으로(2010.12.1.)
- 제58호 :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2010.11.15.)
- 제57호 : 국가위 위상·기능강화와 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2010.11.1.)
- 제56호 : 포스트 모바일 생태계 선도를 위한 혁신전략과 과제(2010.10.15.)
- 제55호 : 한국형 대학 구조개혁 모형의 개발과 활용방안(2010.10.1.)
- 제54호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학의 1인 창조기업 창업 촉진방안(2010.9.15.)
- 제53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클러스터 추진 전략(2010.9.1.)
- 제52호 : OECD 주요국의 농산업 생산성과 R&D 투자 비교(2010.8.15.)
- 제51호 :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유형화 방안과 지원 전략(2010.8.1.)
- 제50호 : 그린 휴머니즘 사회 변화에 대응한 미래과학기술체제 구축(2010.7.15.)
- 제49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과 정책과제(2010.7.1.)
- 제48호 : 북한의 최근 기간산업 재건과 지속가능성(2010.6.15.)
- 제47호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필요성과 과제(2010.6.1.)
- 제46호 : 기술혁신 기반 고용창출력 제고 방안(2010.5.15.)
- 제45호 :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 정책이슈와 과제(2010.5.1.)
- 제44호 : 거대·공공 S&T 챔피언 발굴 및 글로벌 산업화 전략(2010.4.15.)
- 제43호 :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를 통한 OECD 국가의 비교(2010.4.1.)
- 제42호 : 서비스산업 혁신과 성장동력화를 위한 서비스 R&D 추진 전략(2010.3.15.)
- 제41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성과와 과제(2010.3.1.)
- 제40호 :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2010.2.15.)
- 제39호 : 글로벌 녹색경제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2010.2.1.)
- 제38호 :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지역 녹색혁신역량 제고 방안(2010.1.15.)
- 제37호 :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과제(2010.1.1.)

STEPI Insight 발간 현황

2009년

- 제36호 : 100대 제조업 고성장 기업의 전략과 혁신 특성(2009.12.15.)
- 제35호 : 기술혁신형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선방안(2009.12.1.)
- 제34호 :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R&D 효율성 제고 방안(2009.11.15.)
- 제33호 :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 정책 방향과 과제(2009.11.1.)
- 제32호 : 창의적 인재육성의 근본적 한계와 당면과제(2009.10.15.)
- 제31호 : 북한의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협력 추진방안(2009.10.1.)
- 제30호 : 2008년도 한국 기업의 혁신활동 조사와 시사점(2009.9.15.)
- 제29호 : 태양광 기술의 전망과 과제(2009.9.1.)
- 제28호 : 개방형 혁신이 공공부문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2009.8.15.)
- 제27호 : 특허사냥꾼(Patent Troll) 활동에 대응한 지식재산 정책과제(2009.8.1.)
- 제26호 : 우주개발과 우주산업의 연계방안(2009.7.15.)
- 제25호 : 상장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전망: 경기불황 영향분석과 극복방안(2009.7.1.)
- 제24호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2009.6.15.)
- 제23호 : 창조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추진체계 개선 방안(2009.6.1.)
- 제22호 : 북한의 핵 및 로켓기술 개발과 향후 전망(2009.5.15.)
- 제21호 : 바이오기술 R&D 정책 동향과 시사점(2009.5.1.)
- 제20호 :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G-20 '그린' 정상외교 전략(2009.4.15.)
- 제19호 : 제조업 성장에 기여하는 R&D 서비스업 육성전략(2009.4.1.)
- 제18호 : 이공계 박사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2009.3.15.)
- 제17호 : 글로벌 相生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주도형 ODA 추진 방안(2009.3.1.)
- 제16호 : 서비스 R&D 강화를 통한 경제난국 극복(2009.2.15.)
- 제15호 : 상생과 공영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2009.2.1.)
- 제14호 : 세계적 과학자 양성 및 연구환경 조성방안(2009.1.15.)
- 제13호 :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2009.1.1.)

2007~2008년

- 제12호 : 저탄소 사회의 동력과 실현 기술의 특성(2008.12.10.)
- 제11호 : 학연협력의 방향과 당면과제(2008.9.30.)
- 제10호 : 기후변화 대응의 과학기술정책과제(2008.8.22.)
- 제 9호 : 대개도국 호혜적 과학기술협력의 비전과 과제(2008.8.6.)
- 제 8호 : 창의적 프론티어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한 탐색(2008.6.16.)
- 제 7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2008.5.30.)
- 제 6호 :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2007.12.28.)
- 제 5호 : 중소기업의 脫추격형 기술혁신 전략(2007.6.8.)
- 제 4호 : 한미 FTA와 제약산업의 활로(2007.5.14.)
- 제 3호 : R&D 투자와 설비투자(2007.4.12.)
- 제 2호 : R&D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2007.2.26.)
- 제 1호 : 정부 R&D 100억 달러 시대의 쟁점 -2007년 과학기술정책 8대 이슈-(2007.1.2.)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와 스마트 폰(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문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 김종선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E-mail: jskim@stepi.re.kr / Tel: 044-287-2142)

· 주요경력 ·

- 2004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05 - 200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구위원
- 2003 - 2004 일진 그룹 경영기획실 사업기획팀 과장
- 2002 - 2003 관련형 연구 정보 제공회사 Open Knowledge(주)
(일본, 동경) 창립 멤버 및 개발 및 기획 담당 이사
- 2000 - 2001 동경공업대학교 일본 화학진흥협회 연구원

· 주요연구실적 ·

- 김종선 외(2014), 「과학기술 ICT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만들기」, 미래창조과학부.
- 김종선 외(2013),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전략을 위한 사례조사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종선 외(2012),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종선 외(2011), 「남북한 과학기술혁신체제 연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필자 성지은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E-mail: jeseong@stepi.re.kr/ Tel: 044-287-2144)

· 주요경력 ·

- 2005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04 - 2005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주요연구실적 ·

- 성지은·송위진·박인용(2014),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로서 리빙랩 분석과 적용가능성 탐색」,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2호.
- 성지은·조예진(2014),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실험 비교: 지역기반의 녹색전환 실험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제22권 제2호.
- 성지은 외(2013), 「저성장시대에 효과적인 기술혁신지원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성지은 외(2012),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필자 이정찬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E-mail: jlee@stepi.re.kr / Tel: 044-287-2183)

· 주요경력 ·

- 2014-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주요연구실적 ·

- Jungchan Lee et al. (2015). Development of the compact city index and its application to Japanese cities. *Urban Studies*, 52(6), 1054-1070.
- 이정찬(2014), 「일본은 어떻게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가?」, 『동향과 이슈』, 제17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정찬(2014), 「아베노믹스와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과 이슈』, 제1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1 INSIGHT 제175호

발행인 송종국
편집인 김기국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발행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층
문의 동향정보실 홍보·발간팀(044-287-2049 / 2035)
FAX 044-287-2067
인쇄처 미래미디어(02-815-0407)



STEPi INSIGHT www.stepi.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층 | TEL : 044-287-2049 | FAX : 044-287-2067

